

“불쏘시게’ 샌드위치 패널, 안전대책 마련을”

건축물 화재 원인 13%... 노후건물 관리 사각지대 광주·전남 年 200건... “교체·스프링클러 의무화”

최근 대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관련 화재가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등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광주·전남 건축 구조물 화재 8798건 가운데 샌드

위치 패널 관련 화재는 1188건(13.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148건, 전남 1040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5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건수는 2021년 259건에서 2022년 286건, 2023년 264건, 2024년 209건, 지난해 170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200건 안팎을 유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5년간 샌드위치 패널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595억916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건축물 화재 피해액(2812억여원)의 21.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화재 건수 대비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 증폭형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구조로, 저렴한 비용과 시공 편의성 때문에 공장창고, 물류시설 등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단열재 특성상 불이 붙을 경우 내부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등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 역시 외벽에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물 전소와 일부 붕괴로 이어졌다.

정부는 2021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 사용 시 ‘준불연’ 이상 자재를 의무화했지만, 제도 시행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난연 성능이 강화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대전 공장도 1시간 내화 성능을 갖춘 난연 2급 패널을 사용했음에도 화재 확산과 건물 붕괴를 막지 못해, 진화와 인명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준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샌드위치 패널은 한 번 불이 붙으면 내부 단열재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된다”며 “가연성 외장재 건물에 대한 교체 비용 보조나 저금리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공장·창고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 교체가 어려운 경우라도 초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화재탐지 설비 설치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6:30 달맞이 10:30
맑음 18:48 달맞이 01:02



광주	☀️	8~19
목포	☀️	8~16
여수	☀️	9~16
순천	☁️	8~17
구례	☁️	7~20
광주	☁️	8~18
신도	☁️	9~18
흑산도	☀️	7~14
진남	☁️	7~17
진도	☁️	8~16

목포	미물(☁️)	06:46 / 18:38
	셀물(☁️)	11:46 / 23:50
여수	미물(☁️)	01:13 / 13:01
	셀물(☁️)	17:13 / 19:25

대선 투표소 난동꾼 벌금형

마네편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포스터를 전시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8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해 5월29일 오전 10시30분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자 포스터를 걸어둔 채 3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

A씨는 사전투표 사무원 B씨가 전시된 포스터를 수거하려고 하자 ‘손대지 마라’고 외친 뒤 B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포스터 등을 걸어 놓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사전투표 사무원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운 다른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유가족 “안전관리 부실...시·건설사 엄중 처벌”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유가족들이 광주시와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 건축물에서 붕괴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광주시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음을 의미한다”며 “수사 당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와 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시공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시공사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묵인했거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무자 몇 명 처벌에 그치는 ‘숨방망이 수사’는 제2, 제3의 참사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은 참사 직후 원인을 규명하고자 관련 수사에 나섰다. 이날 말 수사 중간발표를 앞두고 있다.

참사 직후 전남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7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관련 서류 등 1900여종과 10만건 이상의 자료를 확보했다.

또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법인 등 총 30여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광주시 공무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계변경 과정과 시공 방식, 감리의 실효성, 발주처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정을 진행했다.

경찰은 빠르면 이달 말 중간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수사의 방향에 따라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사 결과가 현장 관리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그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는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 안내 24일 광주 동구 윤림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동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반려견과 동반한 손님과 직원들에게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해든이 사건’ 내일 구형...법정 최고형 나오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국민 공분 속 판결 주목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해든이(가명) 사건’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구형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남편 B씨도 함께 구속수소됐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를 강조해 만만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반복성과 잔혹성이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살해 고의’와 ‘학대 정도’다. 검찰은 명 자국 등 학대 정황과 약 4800건의 휴대폰 영상 등을 토대로 단순 치사가 아닌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하는 산후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 요소가 될 수 있고,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법정 밖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판을 앞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는 추모 화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결심 공판 당일인 26일 오전 8시부터 피해 아동을 기리는 시민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현수막을 설치하고, 살해된 영아를 추모하는 리본을 착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 한 변호사는 “생후 4개월 된 영아에 대한 반복적 폭행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중대한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고형 구형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 수를 일반인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여수 거문도·완도 여서도 3년간 출입 통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갯바위 오염·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오는 2029년 3월14일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서도, 동도, 고도)와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일원을 갯바위 생태휴식제 임시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해수욕장, 마을 앞 해변은 제외됐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 여가 활동으

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한다.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완도 여서도의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해변의 기업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꼽힌다.

시행 기간에 통제 구역에 출입할 경우 횡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조기검진서 환자 관리까지’ 전남형 결핵정책 강화

도, 고령층 중심 결핵 예방·조기발견·환자 관리 체계 구축

결핵은 한때 ‘과거의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감염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꼽히며, 지속적인 예방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조기검진과 체계적인 환자 관리 정책을 통해 결핵 예방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응으로 결핵 확산 차단과 도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결핵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약 35명으로 OECD 평균의 3.5배 수준이며, 결핵 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전남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6.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전남 결핵 환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결핵 환자 중 약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와 결핵 발생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전남도는 결핵 조기 발견과 환자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경로당 중심 결핵 검진, 찾아가는 취약계층 결핵 검진, 환자·접촉자 관리 강화, 민관 협력 결핵 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 추진으로 결핵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결핵 등록환자는 2018년 1831명에서 2025년 961명으로 감소했으며, 결핵 신환자 역시 2018년 1419명에서 2025년 769명으로 감소하는 등 결핵 발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조기 검진과 체계적인 환자 관리 정책을 통해 결핵 예방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취약계층 검진과 경로당 검진을 통해 2025년 한 해 총 2만4800명을 검진해 23명의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계해 지역사회 결핵 확산 예방에 기여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결핵관리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결핵 예방 인식을 높이고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는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질병관리청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결핵검진 확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비 결핵 대응체계 강화 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조기 검진과 체계적인 환자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발열,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